

## “복합쇼핑몰 민간에 맡기고 현안사업 집중해야”

광주시 민선 8기 출범 한 달  
쇼핑몰 논란에 현안은 뒷전  
신양파크호텔 활용 논의 올스톱  
어등산 개발·지하철 2호선 등  
사실상 손 놓거나 소극적 대처  
금타 광주공장 이전도 난망

민선 8기 광주시가 윤석열 정부에서 쏘아 올린 '복합쇼핑몰' 이슈에 매몰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추진은 민간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지역미래가 걸린 해묵은 지역 현안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옛 신양파크호텔 활용 문제, 금호타이어 합평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복합쇼핑몰 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광역 통합 유통센터(3000억원), 트램·도로 등 연결망 구축(6000억원)에 총 9000억원을 요청한 뒤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이 예시(例示) 차원에서 국가지원부터 들이밀었다가 사실상 퇴짜를 당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측은 기다렸다는 듯 '복합쇼핑몰은 민간영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명할 상태다.

최근 지역시민사회까지 복합쇼핑몰 이슈에 가세하면서, 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한달이 다 되도록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제 광주시는 무등산 주변 난개발을 막으려고 직접 사들인 옛 신양파크호텔에 대한 활용 여부는 의도 올스톱 상태다. 시는 민선 7기인 올 초까지 300억원 규모의 아시아 아트플라자 등을 포함한 최대 1000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등산 생태호텔'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검토했으나, 지역 내 비난여론 등에 막혀 수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를 맞아 인수위 때는 물론 현재까지 현안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요양병원 다시 '비대면 면회'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해진 25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동행요양병원에서 입소자와 가족들이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시는 또 사업비 부족 등으로 예상보다 3~5년 이상 완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만 보이고 있다.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애가 타는데, 마치 남의 일인 듯 민선 7기 뒷만 하고 있다.

17년이나 해묵은 최대 난제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6개월 안에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 후 추진 입장으로 선화했다. 소송이 대법까지 간다면 민선 8기내 해결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선 8기 재협상 등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업자측이 광주시의 소송 유지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 변호인단을 국내 최강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 교체하는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

위를 놓고 소송 중인 서진건설측은 "(변호사 교체는) 그만큼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후한 광주 도심개발의 한축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도 답보 상태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은 송정역 일대를 교통·물류 허브,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는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호타이어측은 광주공장을 합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장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납부까지 했지만, 용도변경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금호타이어측은 공장이전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광주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높은 값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광주시는 관련 법상 사전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광주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사업도 걸돌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가폭력의 현장인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 민주인권기념파크 등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지만, 현 정부 들어 기존 계획의 일부인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240억원) 정도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복합쇼핑몰은) 광주 발전을 위한 작은 조각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민선 8기 초반 복합쇼핑몰에만 매몰되다보니, 지역 중요 이슈들이 가려지고 뒤로 밀리는 듯 해 안타깝다. 이제 복합쇼핑몰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지역을 균형감 있게 발전시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공시가 3억원 시골집 양도세·중부세 모두 주택 수 산정시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중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도시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중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중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연합뉴스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한달 새 9배 늘었다 ▶2면

고교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 수사 ▶6면

굿모닝 예향 - Fun한 도시 광주 한바퀴 ▶22면



## 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주민설명회

○ 일시/장소 : '22. 7. 27.(수) 14:00 / 서구문화센터 공연장 (2층)

○ 참석 대상 : 공원조성계획에 관심있으신 주민

○ 내 용 :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내용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 공원조성계획과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에 관한 설명과 의견청취

\* 당일 16:00 서구문화센터 소방훈련으로 정시 개시 정시 종료합니다.

\* 주차시설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분은 참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사업문의 : 062-385-5863-4

